

2024. 5

국회예산정책처 | 연차보고서

제22대
국회개원

2023 NABO

연차보고서

2023 NABO Annual Report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목차

I	기관 소개	• 주요연혁	04
		• 설립근거 및 목적	06
		• 업무추진 방향	07
		• 조직 및 예산	08

II	2023 주요 업무 실적	• 2023년 업무개관	12
		• 예·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15
		•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34
		•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51
		• 재정·경제 정보 제공	57

III	2023 주요 활동	• NABO 설립 20주년 기념사업	62
		• 토론회 및 설명회	68
		• 대·내외협력	71
		• 업무협약	77

IV	부록	• 2023년 보고서 발간 목록	80
		• 2024년 보고서 발간 계획	84

2023 NABO 연차보고서

CHAPTER

I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기관 소개

주요연혁

설립근거 및 목적

업무추진 방향

조직 및 예산

주요연혁



2003.1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04.5.
「대한민국 재정」
창간

2004.8.
거시경제전망 실시

2004.10.
예산안 분석 실시

2016.5.
미국 의회예산처
(CBO)와 MOU 체결

2015.3.
의원발의 법률안
비용추계 전담

2014.5.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관련 의견제시 의무화
(개정 「국회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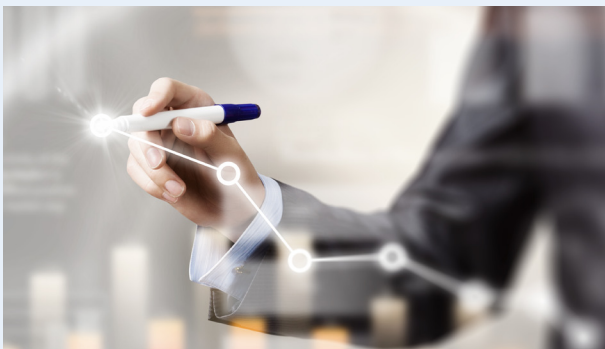
2013.6.
제1회 조세정책토론회
개최

2017.4.
「재정동향&이슈」
창간

2018.3.
「대한민국 공공기관」
창간

2018.9.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
서비스 개시

2019.9.
「NABO Focus」
창간





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및 목적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는 2003년 10월 19일 「국회법」 제22조의2와 「국회예산정책처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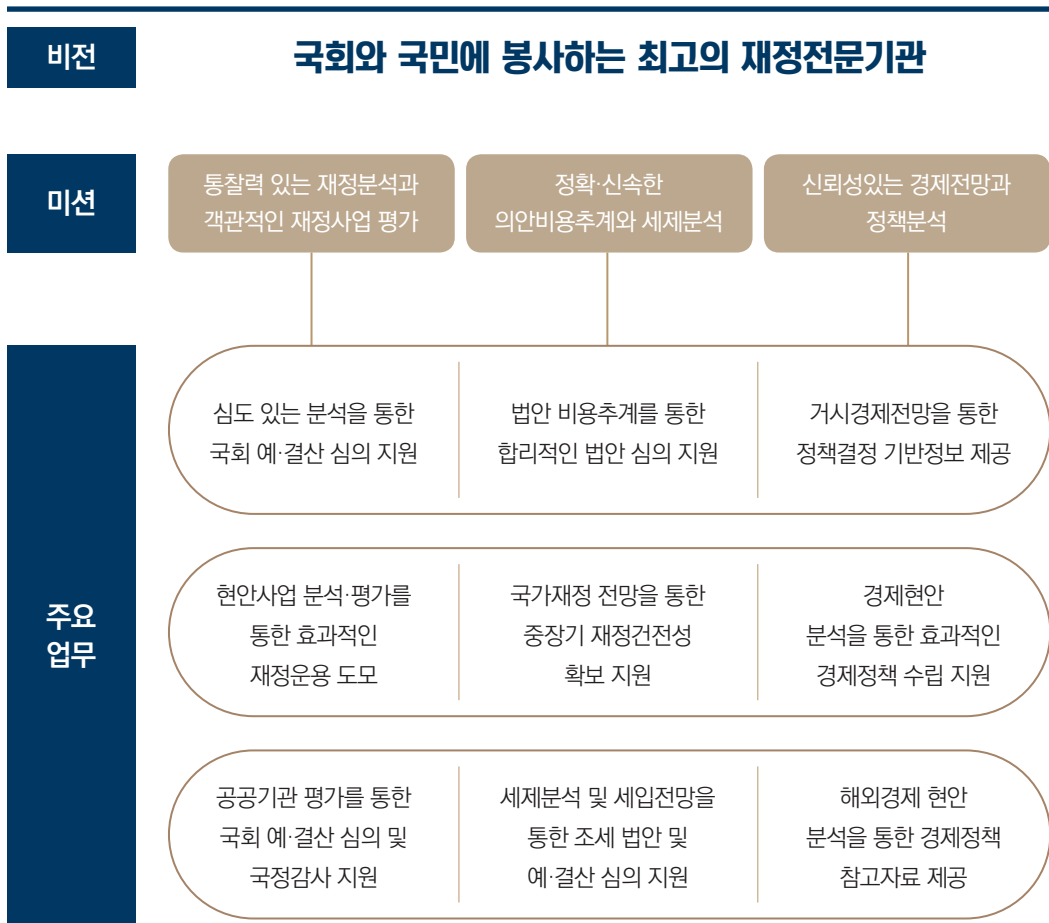
직무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를 표방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 ①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②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③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④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업무추진 방향



직무 수행원칙



조직 및 예산

조직도



인원

직제상 정원 138명(분석·연구부서 111명, 행정지원 업무부서 24명)

현원 135명(2023.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과부족
처장실	3	3	-
기획관리관실	24	24	-
예산분석실	51	49	△2
추계세제분석실	38	38	-
경제분석국	22	21	△1
합계	138	135	△3

2023 예산

예산액 219억 3,300만원

집행액 200억 8,500만원

단위: 백만원



예산액

219억 3,300만원



집행액

200억 8,500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인건비	14,185	13,020
기본경비	2,872	2,640
주요사업비	4,876	4,425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963	841
국가 재정분석 및 평가	1,333	1,063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940	845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779	711
예산정책처 정보화	861	964
합계	21,933	20,085

2023 NABO 연차보고서

CHAPTER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주요 업무 실적

2023년 업무개관
예·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재정·경제 정보 제공

2023년 업무개관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2003년 10월 19일 「국회법」 제22조의2 신설 및 「국회 예산정책처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이래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온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한편,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예·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재정·경제 정보 제공 등 각 분야에서 업무를 고도화하고 내실화하는 한편,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추진하여 그간 일구어온 성과를 정리하고 재정·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예·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최초로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월 17일 발간된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내용과 그 심의과정에서 나온 논의 등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의 예산안 심의의 경과와 결과를 정리한 책자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련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심사에 환류하고, 국가의 재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예산안 심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새롭게 발간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는 재정총량과 중장기 재정현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였다.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정부 시책 및 법령상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적연금과 공공기관 부채를 재정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기존 분석내용에 재정총량 분석과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을 더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연초에 구성·운영되었던 Macro Budget TF의 성과로, 미시적 세부 사업 분석 중심이었던 예산안 분석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래 비용추계를 가장 많이 회답한 해였다. 법안 발의 건수의 증가에 따라 비용 추계 회답 건수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한 해 동안 5,033건의 비용추계를 회답하여 연간 회답 건수가 최초로 5천건을 돌파하였다.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는데, 2023년 4월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용추계 업무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공동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유형을 다채롭게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적연금개혁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3월 31일에는 공동연구의 결과인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총론, 연금개혁 해외사례 분석, 국민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과 재정전망, 지역연금 개혁과 재정전망 등 총 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분석의 깊이와 폭을 더하였다.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전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요인들을 기초로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한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전망하여 새로운 성장잠재력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총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향후 재정·정책 과정에서 문제될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하고자 「경제 현안 분석」을 발간하였다. 지난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적인 저출생·고령화, 국제적인 기후·에너지 위기 등의 문제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적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들 주제를 충실히 분석하여 재정·정책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재정·경제 정보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담당 분석관을 지정하여 통계를 검증하게 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통계 목록을 정리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 제공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조사·분석 회답과 관련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였다. 조사·분석 지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서장 간 회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회답 지연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우수 조사·분석 회답자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회답기한 준수율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다.

설립 20주년 기념사업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7일부터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실시하였다. 9월 7일, 9월 21일, 9월 22일, 11월 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는 각각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등을 주제로 관계 부처, 학계·산업계 인사 등이 두루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는 지난 20년 동안 가다듬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역량과 정책네트워크가 아낌없이 발휘된 사례로 평가된다.

10월 12일에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설립이 결실을 맺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도하고 OECD 등이 지원하여 추진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는 10월 12일에 출범식 및 제1회 국제포럼을 실시하였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몽골, 호주 등 역내 여러 국가 인사가 참석한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마크 해들리(Mark Hadley) OECD 의회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 존 블론달(Jon Blö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축사를 건넸고, 케빈 페이지(Kevin Page) 前 캐나다 의회예산정책처장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제포럼을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시아 지역 내 선도적인 의회재정기구로서의 입지를 되새기는 한편, 참여국과의 공공재정운용에 대한 연구·분석 분야 협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게 되었다.

2023년 10월 19일, 마침내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2003년 10월 19일 「국회예산정책처법」의 시행으로 처음 설립된 이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국회와 재정·정책과정, 그리고 독립재정기구의 발전에 기여한 만큼 스무돌을 맞이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기념에는 국내외의 축하가 잇따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힘써왔다는 점을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지혜와 경험, 전문성을 발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2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그 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국내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필립 스와겔(Phillip L. Swagel) CBO 처장 등 국외 주요 인사도 국회예산정책처의 20년을 축하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기원하였다.

예·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예산안 분석

업무소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1호¹에 근거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예산안 분석 보고서인 「2005년도 예산안 분석」(2004. 10. 25.)을 발간한 이후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시 예산안 총괄분석,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예산안 심의결과」를 통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실적

2023년에는 보다 심층적인 예산안 분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2023. 10. 31.)에서는 총량·총괄분석 및 위원회별 분석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623건의 예산 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였다.² 특히 R&D 예산안 감액 편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었다.³

이와 함께, 거시적인 재정총량 분석역량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2023년 초 “Macro Budget TF”를 구성하여 재정총량 분석을 위한 각 실·국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 재정총량 분석」(2023. 10. 31.)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국회의 예산 심의가 주로 미시적인 개별사업 단위로 진행되는 가운데 재정총량 분석을 병행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발간된 해당 보고서는 경제·재정 전망, 재정건전성 분석 등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과 12대 분야별 자원 배분에 대한 분석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예산안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구조의 중장기적 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보고서(1~6권)」를 발간하였다.

1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사업 내용·대상·일정 등 집행계획이 부실한 경우(116건),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절차가 지연되어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105건), 사업 수·단·기간·지원비율 등이 과다·과소추계 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96건) 등

3 제21대국회 제411회 제2차 국회본회의(2023. 12. 21.), 제21대국회 제410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3. 11. 1. 등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발 간 일 1. 1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개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내실화하고 예산안 심의·확정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경과」를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2022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2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2023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3.8조원이 감액되고 13.5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정부안 대비 0.3조원 감액된 638.7조원으로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및 본회의 심의결과를 상임위원회별·부처별·세부사업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회 심의결과 예산안 대비 증감비율이 큰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감액된 사업,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 등을 기준으로 주요 사업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Ⅰ. 개관'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심의경과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 'Ⅱ. 상임위원회별 심의결과'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회의 심의결과를 회계·기금별 및 세부사업별로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Ⅲ.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에서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도 총수입·총지출 등을 재정총량 차원에서 소개하는 한편, 예산안 대비 증감비율이 큰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감액된 경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 등을 기준으로 주요 증·감액 사업을 분류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내역을 정리하였다.

2023 대한민국 재정



발간일 3. 13.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개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수확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재정제도 및 현안을 소개하여 재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고 있다.

2007년 이전 「대한민국 재정」은 ‘당해연도 예산 설명서’의 성격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 국가재정에 관한 이론과 실제 관련 내용을 보강하여 보다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과 경과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개편을 통해 재정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주요 내용

「2023 대한민국 재정」은 총 3부(제1부 재정의 이해, 제2부 2023년도 재정 현황,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으로 구성되며, 2023년 예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이행책임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무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발생하는 국가채무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시의성 있는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제1부 재정의 이해’에서는 재정의 구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을 설명하고 예산과 결산으로 구성된 재정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하였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정보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성인지예산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다양한 재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제2부 2023년도 재정 현황’에서는 2023년 재정개요와 더불어 예산 및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BTL), 국가보증채무,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등을 소개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주요 세법이 2022년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다루었다.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정리하여 각 부처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 간 일 9. 20.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개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황 및 이슈를 정리한 해설서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이전재원과 연계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총 3부(‘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운용과 관리’,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2023년 예산 및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영 현황, 행정구역 개편 이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 지방재정의 변화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세입 전망,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이슈 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포함한 주요 제도에 대해 현장사례 중심의 설명과 해외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에서는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등 현황 및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주요 재정지표를 설명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8년간 주요 경제·재정지표 변화와 지방재정 세입 추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 재정분권과 사무이양 현황을 제시하였다.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에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운영원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에 더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방재정 분석·진단 제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등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제도의 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현황과 이슈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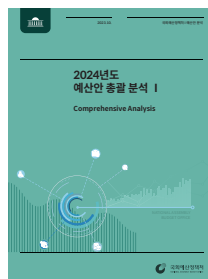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는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와,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내역 등을 새롭게 소개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I-V



발 간 일 10. 31.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개요

정부는 2023년 9월 1일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인 2.8%로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고,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발표와 달리 2024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 예산(GDP의 $\Delta 2.6\%$) 대비 대폭 악화된 GDP의 $\Delta 3.9\%$ 에 달하며, 2024년도 국세수입 역시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적은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성, 전략적 자원배분, 재정 건전성 등을 분석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I-V」를 발간하였다.⁴

• 주요 내용

① 「총괄 분석」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으로, 재정이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R&D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로 재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분석하였다. ② 「재정총량 분석」은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분야별 자원배분 등 거시적 단위의 국회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최초로 발간하였으며, 중기적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 속에서 세입여건, 재정건전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경제 및 재정 전망을 실시하고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정건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금, 공공기관 부채 등 재정에 중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다. ③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④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사업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⁴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VI~VII」은 별도로 소개

결산 분석

업무소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1호⁵에 근거하여 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산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첫 번째 결산 분석 보고서인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2004. 8. 16.) 및 「2003년도 기금 결산 분석」(2004. 8. 16.)을 발간한 이후 매년 정부가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결산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채택 등으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 시 총괄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주요 사업 심층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매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와 그 적절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2023년 실적

2023년에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2023. 7. 27.)에서는 정부 결산 및 공공기관 결산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총 713건의 결산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569건의 지적사항이 본회의 의결안에 반영되었다. 이는 결산 지적사항 중 약 79.8%가 본회의 의결안에 반영된 것으로, 최근 5년 평균 본회의 의결 반영률(약 75.2%)에 비하여 높은 반영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2023년에는 결산 분석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2023. 7. 27.)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은 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생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②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③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주요 사업 분석,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의 4가지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별도의 책자로 발간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의 위원회별 분석 중 부처별 주요 현안 분석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려웠던 다수의 부처와 관계된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분석내용을 제공하였으며, 인구위기 등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시성 또한 확보하였다.

5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I-V



발 간 일 7.2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개요

2022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건전성, 재정운용 결과 등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된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I-V」를 발간하였다.⁶

• 주요 내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관리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4조원이 악화되어 1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0조원이 증가한 1,067.7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평으로, 최근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왔으나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적 물가상승, 금리인상, 공급망 위기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지고 있어 수입 측면에서는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① 「총괄 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하여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중립경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였다. ④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서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은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다.

⁶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VI」은 별도로 소개

사업평가

업무소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4호⁷⁾에 근거하여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첫 번째 사업평가 보고서인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2004. 8. 31.)를 발간한 이후 매년 정부의 주요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업평가는 경제·산업·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법적 근거, 추진체계, 성과, 재정투입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2023년 실적

2023년의 경우 예결산 심사와 사업평가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및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 사업평가 보고서를 포함하여 발간하였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2023. 7. 27.)에는 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생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②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③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주요 사업 분석,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의 4가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발간하여, 기존의 위원 회별 분석 중 부처별 주요 현안 분석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려웠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내용을 제공하였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2023. 10. 31.)에 ①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② 국고보조사업 분석, ③ 재난정책보험 사업 분석을 포함하여 발간하여 농업, 국고보조분야 전반, 재난 관련 사업에 관한 예산안 심의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전략을 다룬 ④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을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중장기적 재정요소 역시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을 발간하여 국유재산, 국토, 과학기술, 지방분권, 고등교육 분야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⁷⁾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요소 분석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발 간 일 4. 12.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개요

정부는 2021년 말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거한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면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2021년에는 발생주의 도입 이후 10년 만에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목주,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여 재산가치를 현행화하였다. 그 결과 2021년의 자산재평가로 평가증 240.9조원, 평가감 92.6조원이 발생하여 순자산은 총 148.3조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가 2011년부터 최초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무제표는 2022년까지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오류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되기 전 감사원 결산검사를 통하여 밝혀진 오류액의 주요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 재평가 오류를 포함한 자산 평가 오류이다.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이 낮다면 국가 총자산 규모 또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향후 재정수입 예측과 종합적 국가 재정 관리의 정확성이 저하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유재산 가치의 현행화를 위하여 2021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자산재평가가 신뢰성 있는 자산가액을 제공하여 재평가 대상 자산의 가치가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주요 내용

2021년 국유재산 자산재평가에서 95.8조원⁸의 신뢰성 부족 금액이 발생했다. ①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가 62조 5,578억원(65.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② 상각완료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수정 및 재평가를 실시한 규모는 16조 6,302억원(17.36%)이다. ③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경과연수별 잔가율 오류 및 물가배수법 선택 오류금액이 16조 5,810억원(17.31%) 발생했고, ④ 새만금개발청은 토지의 면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을 재평가액으로 입력하여 293억원(0.03%)의 평가감 오류를 인식했다.

따라서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 기획재정부, 중앙 및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등 국가결산 관련 참여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 결산검사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 제도를 도입하여 결산검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8 전수조사가 아닌,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산재평가 세부자료 중 일부를 분석한 금액임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



발 간 일 4. 2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개요

세계 각국은 도시 문제의 해결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도시 모델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마트도시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2018년에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시범도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들을 파악·개선하기 위해 2021년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정부는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와 함께 세계 스마트도시의 선도모델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와 부산광역시(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사업지) 등 2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 국가시범도시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또한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운영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지역이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발굴·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은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국토교통부가 효과성이 검증되어 확산·보급하겠다는 솔루션들은 2020년에 챌린지사업으로 도입된 솔루션인데, 사업이 끝나지 않은 2020년에 보급 솔루션으로 선정되어 2021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시범도시 구축·운영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



발 간 일 6. 16.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개요

2023년 기준 과학기술분야 16개 국립연구기관의 총 예산은 약 1.7조원, 총 인력은 5,700여명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립연구기관의 고유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중심의 R&D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립연구기관의 R&D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연구기관의 R&D 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쟁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를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

국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혁신과 관련하여 연구비 집행체계, 연구사업 관리체계, 연구인력 운영 체계 등의 R&D 체계를 중심으로 제시한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는 국립연구기관의 정의, 지정범위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 임무형 R&D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립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체계적인 R&D 지원과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미흡한데, 법률로 국립연구기관의 정의와 지정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연구기관 시험연구비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효율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출연금에 준하는 시험연구비의 구체적인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국립연구기관은 자체적인 시험연구비 내부 규정,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비 집행·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연구기관은 R&D 연구사업관리규정 마련과 조직, 전담 인력 확충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평가대상에 국립연구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립연구기관의 R&D 관리 및 성과활용 지원체계의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립연구기관은 우수 신진 연구자 충원을 위한 연구자 처우개선, 우수 연구자 보상체계, 교육·훈련, 산학연 인력 교류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연구기관이 고유 연구개발 업무 외에도 법정업무와 비연구분야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연구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연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성과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발간일 6. 16.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개요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재정분권 정책이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5.8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현재 3~4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주요 분석결과,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세 보다는 시도세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주체인 시군구의 집행률은 최근 2년간 58~59%로 서 낮은 수준이므로 지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이양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결산 등 이행상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어, 향후 재정자율성·책임성 등 지방이양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는 사업들이 지방사무로서 적합하다고 답하였으나, 환경·사회복지·국토 및 지역개발·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업무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조사되었다. 향후 정부는 이들 사업의 예산규모 및 성과 추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방이양 이후 예산·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국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재배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산 분석시리즈 VI]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1~4권)



발간일 7.2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및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개요

정부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 결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을 발간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주요 사업', '국민취업제도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 주요 내용

- 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에서는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았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 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연령의 적정성 검토 등과 함께 저출산 예산 범위에 대한 관리 및 환류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②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추진체계·성과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정책의 추진체계의 제도 개선 및 사업 범주 명확화가 필요하며,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분야별로 정책 여건 및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청년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 ③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 정책 수립 경과와 추진체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디지털 전략」의 중장기 재정투자계획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하며, 기술공급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 보급역량 강화 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에서는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 1차 고용안전망(고용보험) 및 3차 고용안전망(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실적,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율,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중장기 성과목표를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공개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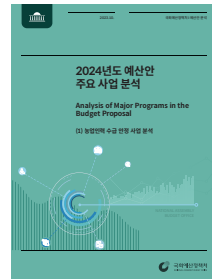
[예산안 분석시리즈 VI]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1~3권)



발 간 일 10.31.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및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개요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군·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을 발간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국고보조사업, 재난정책보험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 주요 내용

- ①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에서는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을 '농업 고용인력 부문(취업 임금근로자 관련)', '청년농 육성 부문(농업 경영주 관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스마트농업 등 생산성 향상 부문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농업 고용인력 부문과 관련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 활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확립, 농촌인력중개센터 실적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국고보조사업 분석」에서는 국고보조금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부정수급 정보 공유·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③ 「재난정책보험 사업 분석」에서는 재난정책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그동안의 추진 성과 및 위험분산체계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품목·축종별 특성 및 보험수요를 반영한 상품 개발·개선조치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가입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의 보장성 및 국가 재정부담 관리 측면에서 손해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민간재보험 출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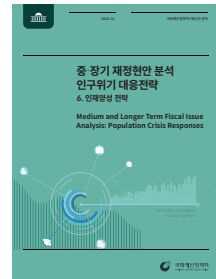
[예산안 분석시리즈 VII]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1~6권)



발간일 11.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및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개요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0.7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생 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2022년 51.7조원, 2023년 48.2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중장기 변화로 인한 경제·재정의 영향을 살펴보고, 인구위기에 대응한 정부 정책(저출생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인재양성)을 분석·평가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보고서(1~6권)」를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2070년 총인구수는 통계청(2021년)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점(2020년 5,184만명) 대비 1,418만 명(27.4%) 감소한 3,766만명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 전반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2040년부터는 연평균 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70년 192.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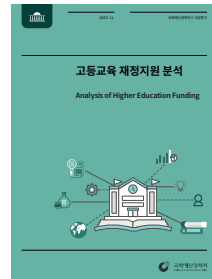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한 정부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 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돌봄 교육 향상, 사교육비 부담 경감,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구 확충차원에서 이민정책은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인력 이민을 위한 요건 완화,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유학생 유입·관리 강화, 이민정책의 국민수용성 제고 등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해서 첨단기술 육성을 통해 노동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며, 인공지능·우주개발·로봇 등의 첨단기술 분야를 민간 주도의 민관협력체제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인재양성 정책은 인재양성 근거 법률 제정과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발 간 일 11. 1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개요

최근 학령인구 감소, 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 지형의 변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및 재정지원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재정지원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을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평균 대비 고등교육 투자 및 정부 재정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대에도 대학의 교육 여건, 국제경쟁력 등 고등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대상·지원단가 확대로 대학생 가구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소요를 재검토하고 중장기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등록금 규제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은 평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2년 이후 지속된 등록금 규제와 입학자원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대학 육성 사업 및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체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통 성과지표 발굴 등 성과관리·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하였으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 시 교육여건, 교육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재학생 수'라는 규모 관련 지표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 평가

업무소개

공공기관 평가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사업 및 자체 사업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1호 및 제4호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제공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거나 국정감사에 활용되는 등 공공기관 심사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매년 발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및 재무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3년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대비 보고서인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최초로 발간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실적

2023년에는 보다 심도 있는 공공기관 결산 분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2023. 7. 27.)에서는 중점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혁신계획을 분석하였고, 공공기관 공공요금 원가산정 및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 내 여유자금 운용실태 등 주요 쟁점과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한국전력의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의 자본확충 적정성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총괄원가 상승 문제 등을 분석하였고,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재산 매각대금 문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지원을 위하여 2023년 9월 처음으로 국정감사 대비 보고서인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2023. 9. 14.)를 발간하였고, 공공기관의 주요 현황과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간설명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이는 국정감사에 맞추어 공공기관별로 최근 현황과 이슈를 정리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약 53건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¹⁰

⁹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요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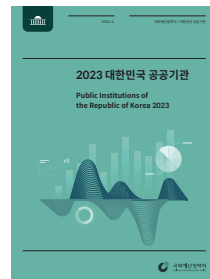
¹⁰ 한겨레, “한전과 달리 자회사는 초과이익? 일감 계약이 요금 상승으로,” 동아경제, “공공기관 지정변경 쟁점,” 경인일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64% 부실, 국회예산정책처, 혁신계획 분석,” 등 언론보도 53건(2023. 9. 15. 기준)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 간 일 4. 5.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개요

2023년에 지정된 전체 347개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2021년 결산 대비 33조 3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4.4%에 해당하는 등 공공기관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 및 재무 현황 등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

① 본 보고서의 1부 ‘공공기관의 이해’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의와 변천사, 공공기관의 관리 정책,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통하여 공공기관 제도의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유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12.)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였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정책(「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② 제2부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의 지정 현황 및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공공기관의 재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부채 등 재무 현황,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에 따른 주요 현황을 새롭게 정리하였고, ‘공공기관의 ESG 현황’ 목차를 신설하여 공공기관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ESG 지표 현황을 추가하였다. 또한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변동 현황, 공기업 사채발행 한도 및 현황과 국가부채에 포함된 공공기관 부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재무 현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은 별도 장으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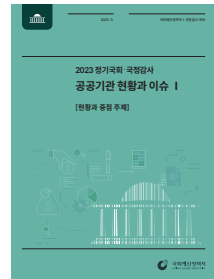
③ 마지막으로 제3부 ‘주요 특성별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을 주요 특성별로 범주화하여 정부출자 공공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금융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분석·정리하였다.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V



발 간 일 9. 14.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개요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및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정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되고 있으나, 기관별·공시항목별로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충실히 지원하고자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다. 제Ⅰ권에서는 중점 주제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주요 쟁점, 출자회사 관리를 통한 적절한 공공요금 부담 필요성,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 과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의 이슈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제Ⅱ권부터 제Ⅳ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 등 현황 및 재무건전성, 출자회사, 공공요금, 복리후생, 성과급, 징계 현황 등 개별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다루어 가독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재정전망

업무소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을 전망하는 재정전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전망은 일정한 가정 하에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큰 재정 추이를 예측하는 것으로 전망 기간에 따라 중기 재정전망(10년)과 장기 재정전망(30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재정전망을 기준전망 또는 기준선(baseline)이라고 하는데, 기준전망은 정부 예산안이나 새로운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활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재정전망 결과를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새로운 정책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중기 재정전망과, 인구구조 변화 등 거시환경적 변화나 사회보험 등 장기에 걸친 재정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병행하고 있다.

2023년 실적

2023년에는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과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동 보고서를 통해 2024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 예산안, 그리고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포함된 정책변화를 반영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triangle 3\%$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율은 2027년부터 $\triangle 3\%$ 미만으로 유지될 전망이다.¹¹

이외에도, 2023년 3월 기획보고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2022년 7월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망 보고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발간하였으며,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재량지출에 대해서도 중장기 전망방법을 개선하고자 기획보고서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 연구」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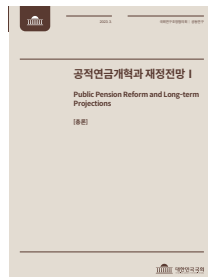
¹¹ 이러한 차이는 정부가 의무지출을 국회예산정책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한 것에 기인한다.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IV



발간일 3.3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 개요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담은 것으로, 국회가 주최한 '제1회 정책현안 대토론회'에서도 그 내용이 발표되었다.

• 주요 내용

제Ⅰ 권은 총론으로, 전체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아우르는 주요 이슈별(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성, 형평성 등)로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주요 개혁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Ⅱ 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구성한 연구진들이 주축이 되어 독일·캐나다·일본·스웨덴·영국 등 5개 국가의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제Ⅲ 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개혁의 주요 쟁점 및 방안을 정리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주요 개혁방안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기(2055년→2069년)되고, 보험료율 인상과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기(2055년→2063년)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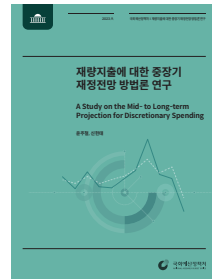
제Ⅳ 권에서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과 개혁방안을 소개하고,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모수를 일치시키는 가정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재정전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각 제도의 보험료율을 15%로, 연금지급률을 1.25%(소득대체율 50% 수준)로 개편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망 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반면, 공무원·사학연금은 전망기간 후반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하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 연구



발 간 일 9. 2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개요

정부지출은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지출과 국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재량지출로 나눌 수 있는데, 재정전망에 있어 재량지출은 의무지출만큼 체계적인 전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재량지출에 대한 주요 전망 사례를 보면 분야·부문의 구분 없이 총액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 일부 분야·부문에 대해 예시적으로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재량지출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전망하기보다는 적실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재량지출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경비에 해당하며 인구변수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영역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재량지출 규모가 큰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지출대상자를 고려할 때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이므로, 이러한 지출 등을 전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재량지출 규모가 큰 분야라 하더라도 변동성이 클 경우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계열 전망모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과거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경 분야를 전망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사업 수가 많고 지출대상자와 지급단가 등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의무지출과 같은 전망방법을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시계열 전망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단위급 및 공적분 검정 결과 장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는 시계열 분석 모형으로 자기회귀시차분포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였다. 셋째, 전망 대상 영역에 대해 2007~2011년의 재량지출 자료를 추가로 구축하고, 부문 변경에 따라 단절이 있거나 불절된 자료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연계·조정하여 시계열을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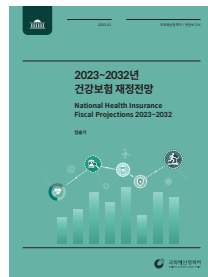
전망 결과, 재량지출에 대한 현행 전망 방식과 다르게 각 전망 대상의 경상 GDP 대비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경상 GDP 대비 비율은 장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거나(인건비, 고용·노동 부문, 환경 분야) 감소하는(아동·청소년 영역)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특정 분야·부문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량지출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시 분야·부문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재량지출 전체 금액이 아닌 분야·부문 등을 구분함으로써 재량지출 내 분야별 자원배분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발 간 일 10. 10.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 개요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이용 변화와 정책 변화를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수행하였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련 법 개정 등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발간되었다.

•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전망과 주요 정책 변화 및 필요 보험료율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기결정 건강보험료율(2023~2024년)과 최근 3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2025~2032년) 2.06%를 가정한 기본전망의 경우, 건강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8.7%)이 연평균 수입 증가율(7.2%)을 상회하면서 2024년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2028년에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2조원, 지출은 195.2조원에 도달할 전망이며, 적자 폭은 2024년 1.4조원부터 2032년 20조원까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보험료 조정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보험료를 8% 상한 폐지 시에도 적자 전환 및 준비금 소진 시점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정 지원율 준용 시 재정적자 전환과 준비금 소진 시점은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본전망에서 가정한 보험료를 상한(8%)을 고려하지 않고 각 재정목표별로 요구되는 필요 보험료율을 분석하였다. 재정수지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2032년까지 보험료율을 8.93%까지, 2027년 국고지원이 종료된 후 재정수지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10.06%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비금 소진 방지(보험급여비 1개월분 유지)를 위해서는 2032년 9.29%까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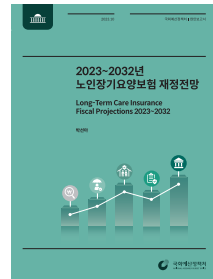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한 수입 확충 및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정부의 재정전망 수행 및 결과 공개 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발 간 일 10. 10.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 개요

본 보고서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 재정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향후 10년 재정전망을 제시하였으며, 일련의 정책목표에 따른 재정전망을 실시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 논의에 기여하고자 발간되었다.

•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행 보험료를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재정 지출 속도(연평균 10.1%)가 수입 증가 속도(연평균 8.9%)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32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32.4조원, 지출은 34.7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다. 건강보험료를 대비 장기요양보험료를 2023년 수준인 12.81%로 동결할 경우, 재정수지는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국고지원금을 보험급여 예상 지출액의 20%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30%로 상향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각각 2029년, 2032년으로 지연되고, 누적준비금은 각각 2032년 기준 3.6조원, 11.5조원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수지 균형과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3년 0.91%에서 2032년 각각 1.28%, 1.29%까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장기요양 지출 급증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과 국고지원 상향 등의 선제적 조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전망 실시의 명문화 필요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결정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 간 일 10. 3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개요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변화(세법개정안, 의무지출 관련 법령 개정안, 지출구조조정 등)를 고려하여 10년 기간에 대해 재정총량을 전망하고,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전망(baseline)과 비교하여 예산안 등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총량(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을 전망하였다.

• 주요 내용

2024년도 예산안은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관리재정수지 △92.0조원(GDP 대비 △3.9%), 국가채무 1,196.2조원(GDP 대비 51.0%)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총수입은 연평균 3.7%, 총지출은 3.6%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에 △2.5%로 개선되며 국가채무 비율은 53.0%로 계획되었다. 정부 예산안의 주요 정책변화는 수입의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소득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법인세), 지출의 경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 완화(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2032년 동안 총 5.1조원 감소하고, 총지출은 의무지출 확대 등으로 29.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동안 총수입은 감소하고 총지출은 증가하므로 예산안 등의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전망과 비교할 때 관리재정수지는 2023~2032년 동안 총 30.4조원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32년에 2023년 대비 0.9%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총수입은 5년 동안 88.3조원 작으며, 총지출은 4.9조원 크다.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정부의 재추계(9.17.)를 기준으로 하면, 총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5년 동안 29.3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작고, 총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76.5조원 크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기준으로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중기재정전망 결과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부터 △3.0% 미만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비용추계

업무소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2호¹²에 근거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에서 법률이 통과된 경우 그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를 재추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10월 설립 이래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하여 2015년 3월 19일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전담하고 있다. 비용추계는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수치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변화한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소요를 재추계함으로써 실제 법률이 시행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실적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안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이래 비용추계를 가장 많이 회답한 해이다. 법안 발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안에 부수되는 비용추계의 회답 건수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회답된 비용추계 건수는 총 5,033건으로, 연간 회답 건수가 최초로 5천건을 넘어섰다.

양적으로 증가한 비용추계를 적시에 처리하면서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는 재정추계·세제 분야의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수록하여 발간되는 계간지로, 2023년에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정전망, R&D 조세지원 현황 등을 수록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였다. 또한 전년도에 가결된 법률의 재정소요를 재추계하여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2023.5.26.)을 발간함으로써,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른 재정 영향을 총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용추계 업무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힘을 쏟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내 직원연구모임인 「재정추계 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비용추계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용추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경험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비용추계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¹²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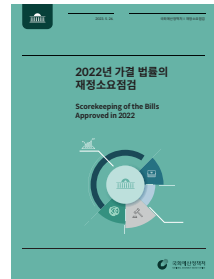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일 5.26.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개요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입법의 영향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 통제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수반법률은 의원발의안과 위원회대안 등 뿐만 아니라 정부제출안 모두를 포함한다.

• 주요 내용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서는 2022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영향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입법률과 지출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법률에서는 법률별·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영향을, 지출법률에서는 분야별·성격별 재정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을 보다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의 점검 대상은 2022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433건 중 재정을 수반하며 점검이 가능한 110건의 법률(221개의 재정수반요인)이다.

점검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 3,994억원의 수입 감소와 1조 9,53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수입법률과 지출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법률에서는 법률별·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영향을, 지출법률에서는 분야별·성격별 재정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입법률에서는 「법인세법」 연평균 4조 1,163억원 감소, 「소득세법」 연평균 2조 6,992억원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연평균 8조 2,351억원 감소, 「종합부동산세법」 연평균 1조 1,202억원 감소 등이 예상되며,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로는 과세표준 관련 연평균 5조 9,423억원 감소, 세율 관련 연평균 5조 2,282억원 감소, 세액공제·감면 관련 연평균 3조 2,909억원 감소, 과세대상 관련 1조 7,778억원 감소 등이 예상된다. 지출법률에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 연평균 5,507억원 증가, 교육 분야 연평균 1,408억원 증가, 환경 분야 연평균 1,377억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연평균 4,591억원 증가, 농림수산 분야 연평균 3,986억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연평균 1,165억원 증가 등이 예상되며, 지출성격별로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3,667억원 감소, 재량지출은 연평균 2조 3,2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종합하면,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분석

업무소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포함하여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이와 관련한 국회 위원회 및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고유의 국세수입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세입 전망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재정수입을 수반하는 조세 수입 관련 법률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회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2014년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조세(국세) 관련 법률안의 비중이 높는데, 정부 제출안과 달리 의원 발의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통해 기초적인 세입증감 정보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023년 실적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개정세법의 국회 심사 결과와 주요 내용,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를 정리하여 개정세법의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 현행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현황과 국제동향 등을 수록한 「2023년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조세의 일반론,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및 세목별 주요 내용, 국세·지방세 조세지출을 총 망라하고, 관련 통계를 수록한 조세의 해설서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한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을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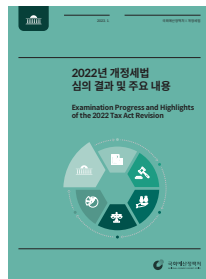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공시가격의 연혁 및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보유세 과세가격 운용현황과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2년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에 따른 논쟁이 확산되면서 세수오차의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획 보고서로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국세 세수오차의 발생 추이 및 원인,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세수입 전망과 연계하여 2024년에는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 간 일 1.9.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개요

2022년 국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법률안 334건은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를 거쳐 합의한 17건의 법률안을 2022년 12월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2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의 과정을 정리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 주요 내용

2022년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하였다.

법인세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유인을 증진하여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인하하였으며, 종전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 단순화하여 기업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였다.

상속세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상속공제의 중견기업 적용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공제금액을 60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5년간(2023~2027년) 64조 4,081억원(연평균 12조 8,81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3 대한민국 조세



발 간 일 4. 2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개요

「2023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이론적 개념과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세목별 구조 및 현황, 국제조세제도 및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해설서에 해당한다. 특히 2023년 보고서는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동향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조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을 추가하여 과거 조세정책의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함의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주요 내용

조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 경기안정과 같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특히 조세가 경제의 역동성 회복,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마련, 소득불평등 완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향후 조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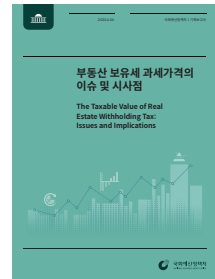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제21대 국회 개원 기념 보고서의 일환으로 「2020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한 후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2023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해설서로서 조세의 일반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세목별 과세개요와 국제비교를 포함한 관련 주요 통계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최근 세법개정 사항을 수록할 뿐 아니라 최근 제도 변화와 새로운 동향을 함께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조세의 이해 및 조세의 성립과 규범체계, 국세, 지방세, 조세지출 등 총 5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조세의 일반론과 함께 우리나라 조세법 체계 및 과세요건, 조세수입 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제2부는 조세의 과세요건과 규범체계, 조세의 성립·확정·소멸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제3부와 제4부에서는 현행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별 개요,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최근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국제동향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제5부에서는 조세지출의 의의, 유형, 예산제도, 관리제도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조세지출 현황을 제시하였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발 간 일 4. 24.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개요

본 보고서는 공시가격 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국가의 보유세 과세가격 운용현황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공시가격의 평가(산정) 과정, 검증 과정,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이슈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운용하고 있다. 이들 세목은 과세가격으로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수조사방식을, 토지와 단독주택 등의 경우 표준-개별 대량평가(산정)방식을 통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및 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산정)하여 공시한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주로 지방세로 운용되고 있으며, 과세주체인 지방정부의 산하기관 등에서 부동산 유형에 관계없이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부동산 유형(표준 부동산, 개별부동산, 공동주택)별로 평가주체와 가격공시방식이 상이한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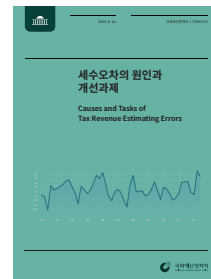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과정별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우선 조사·평가(산정) 과정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표준 부동산의 과소 산정 및 일부 개별주택에서 나타나는 가격역전현상 이슈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검증 과정에서는 부동산 유형별로 검증절차가 상이한 문제와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낮은 기초자료의 공개 수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유세제의 공시가격 활용에 있어서 주거 유형별로 차별적인 공시가격 평가체계, 부동산 유형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상이한 적용, 부동산 가격 급변기의 공시가격 적용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발 간 일 8. 16.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개요

2021년 및 2022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오차의 발생이 재정운용상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수오차의 특징 및 최근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세수전망의 정확성 제고방안 및 재정운용상의 개선과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우리나라 세수오차율의 추이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2000년대 이후 경기변동을 감안한 상대적인 세수오차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비중 증가와 같은 조세구조의 변화 및 소득 상위계층의 비중 확대 등 세입기반의 분포적 특성의 변화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과 같은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은 예상치 못한 경기국면의 전환 시 주로 발생하며,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 세목이 오차율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세수오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재산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오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등의 정책적인 보완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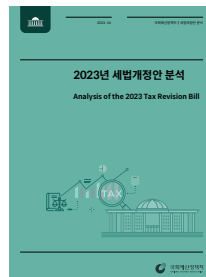
이러한 세수오차의 축소를 위하여 소득·소비의 분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미시자료의 전망 활용과 정책효과를 반영할 미시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등의 세입전망의 개선이 요구되며, 경기변동의 구조변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국면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적인 세입 증가가 구조적인 재정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보하고, 대규모 세수오차의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 간 일 10. 3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개요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며, 2024년에도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및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는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의 극복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투자 활성화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주요 국가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 발표와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기존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소폭의 개정안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주요 정책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여 국회 심사과정이 생략되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노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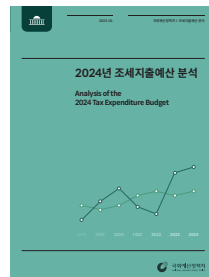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누적법 기준 4조 2,176억원, 순액법 기준 6,389억원의 국제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 발표(2024~2028년 동안 누적법 기준 △3조 702억원, 순액법 기준 △4,719억원)보다 세수감소 규모를 크게 보았다.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해서는 2024~2028년 동안 순액법 기준으로 개인의 세부담은 6,094억원, 법인의 세부담은 1,5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발간일 10.3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개요

조세지출은 국가가 경제·사회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을 감면하는 재정지원이다.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조세지출예산은 77.1조원(명목GDP 대비 3.3%) 수준으로 전년 대비 7.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고 조세지출 관리제도 운용 전반을 검토하여 조세지출 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 주요 내용

먼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감면을 관리제도의 구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정한도 산식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연례적인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입기반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부처 자율평가 보강,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의 일몰관리 강화 및 심층평가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주요 전망 방법·변수의 공개·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과제를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최소화,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 환류 강화 방안의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지출예산서의 정확성·완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계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조세지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지방의 조세지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세·지방세 조세지출의 총계를 파악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세·지방세 조세지출을 관리·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 간 일 10. 3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개요

본 보고서는 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27년의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부 전망과 비교·분석하였다.

• 주요 내용

2024년 국세수입은 361.4조원으로, 2024년 정부 예산안(367.4조원)을 6.0조원(△1.6%)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법인세(정부전망 대비 △2.7조원)가 상반기 영업실적의 부진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정부 예산안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 등에 기인한다.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간 중 경 상성장률 전망(연평균 4.6%)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법인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2024년까지 감소한 후 2024~2027년간 연평균 8.2%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 것 등에 기인한다. 한편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전망보다 5년 합계 30.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NABO vs. 정부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3-'27 (증가율) [합계]
NABO	국세수입 전망	340.3 (△14.1)	361.4 (6.2)	390.4 (8.0)	416.6 (6.7)	438.8 (5.3)	(6.6)
	경상성장률	2.2	4.2	5.1	4.8	4.4	(4.6)
정부	국세수입 전망	341.4 (△13.8)	367.4 (7.6)	401.3 (9.2)	423.2 (5.5)	444.9 (5.1)	(6.8)
	경상성장률	3.4	4.9	4.6	4.4	4.2	(4.6)
NABO-정부		△1.1	△6.0	△10.9	△6.6	△6.1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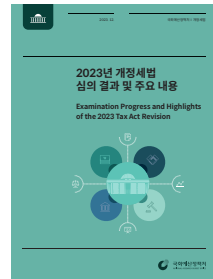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및 연평균 증가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 간 일 12. 27.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개요

2023년 국회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1월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시작으로 약 한 달에 걸쳐 56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세 관련 세법 14건(2023. 12. 21.)과 지방세 관련 세법 5건(2023. 12. 20.)이 의결 됐다.

•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2023년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과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정기회 심사대상 안건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신설, 기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동 개정안들은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고, 이 외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출산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기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확대는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이 120억원 이하로 축소되었다. 이 외에 자녀장려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를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등은 정부안대로 의결되었다. 추가로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된 안건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등도 의결되었다.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경제전망

업무소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3호¹³에 근거하여 거시경제 전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경제 전망 분석보고서인 「NABO 경제동향 및 전망」(2004. 8. 9.)을 발간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경제 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는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에 대한 「NABO 중기경제전망」을 함께 발간하고 있다.

2023년 실적

2023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전망 분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23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요인들을 기초로 2023년 경제성장률, 소비 및 투자,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금리 등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전망하였다. 내수·수출 둔화, 제조업 부가가치 감소 및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 고용의 제한적 증가 등을 전망함으로써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는 중기적인 대내외 경제변수들을 감안하여 5년간(2023~2027년)의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등에 더하여 잠재성장률, 온실가스 배출량, 총인구 및 합계출산율 등의 거시경제지표 추이를 예측하였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전망하여 새로운 성장잠재력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으며,¹⁴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총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¹⁵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보고서에 수록된 경제성장률 전망치(2023년 1.1%, 2024년 2.0%)는 2023년 국정감사 및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는 등 국회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논의함에 있어 활발히 활용되었다.¹⁶

¹³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¹⁴ 잠재성장률은 2023~2024년 2.2% 수준이었다가 하락하여 2025~2027년 2.1%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¹⁵ 합계출산율은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하여 총인구는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연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예상

¹⁶ 제21대국회 제41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1. 7.), 제21대국회 2023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2023. 10. 19.) 등

2023 경제전망 I-V



발 간 일 3. 31.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개요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국내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국내경제의 주요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2023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상반기 중에는 소비, 투자 등의 내수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수출 또한 둔화되나 하반기 중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며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2%를 웃도는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안정을 통해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등이 전망되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서의 생산이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건설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미분양 주택 해소 가능성이 기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도 서비스업 전망치의 상향 조정 등으로 소폭 상승 조정되었다.

분배 부문에서는 먼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전년보다 축소되는 가운데 저임금일자리 증가 등으로 임금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 증가율도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자본에 대한 투자 둔화로 고정자본소모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순생산 및 수입세와 영업잉여는 거저효과로 인해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지만, 증가율은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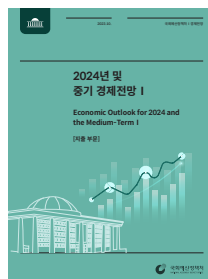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에서 2023년에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발간일 10.5.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개요

2023년 세계 경제는 통화 긴축과 금리 상승 지속, 미·중 갈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2022년 대비 둔화되었다. 2024년에는 교역량 회복과 제조업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 개선된 경제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하락 안정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 주요 내용

2024년 우리 경제는 2.0% 성장하여 2023년(1.1% 전망)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겠으나 성장률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량이 2023년의 둔화에서 벗어날 전망이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전 산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2023년에 상반기 중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2.0%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수출이 점차 개선되며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국내총소득(GDI)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여 지난 5년 대비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명목임금 상승률은 저임금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1%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5년(연평균 3.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총인구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2027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연평균 0.14% 감소하겠으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23~2027년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1% 수준으로, 2018~2022년에 비해 0.3%p 하락할 전망이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의 성장기여도를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기준금리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대비 하락한 연평균 3.0%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금융 불안, 고금리 장기화등도 향후 국고채금리(3년 만기)의 하방 압력을 높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석

업무소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3호¹⁷에 근거하여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첫 번째 경제 현안 분석보고서인 「재정지출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분석」(2004. 10. 20.)을 발간한 이후 주요 경제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편 2022년부터는 매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대한 안내서 기능을 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동 보고서들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제공되어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질의 및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실적

2023년에는 보다 심층적인 경제현안 분석과 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 대한민국 경제 안내서 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23년 경제현안 분석」에서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 팬데믹 이후의 재정운영 방향 및 저출산 등 현재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분석하였으며, 「2023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주요 경제지표를 보강하고 경제정책과 재정사업의 연관성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2023년 경제현안 분석」은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물가, 금리상승, 재정, 투자, 수출, 인구 및 기후·에너지 위기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현 시점에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23 대한민국 경제」는 주요 경제지표를 보강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안내서로서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경제정책이 재정사업을 통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여 경제정책에 생소한 국민이라도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경제정책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발간된 해당 보고서들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수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법·제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정보를 제공하였다.

¹⁷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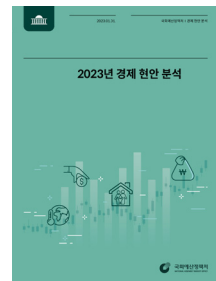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일 1.31.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개요

2022년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통화긴축에 따른 수요부진 등 2023년은 대내외적으로 경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2023년 우리 경제가 당면한 8대 현안(경기현황·성장경로, 물가, 금융, 재정, 투자, 수출, 인구, 기후·에너지 위기)을 선정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새롭게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Ⅰ장(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에서는 투자, 수출 등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구위기, 기후·에너지 위기 등을 고려한 성장 전략 모색을, 제Ⅱ장(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물가)에서는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 대응을 제안하였고, 제Ⅲ장(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금융)에서는 금리상승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여력 확대 및 금융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 제Ⅳ장(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재정)에서는 경기둔화에 대응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재정운영 기조 및 재정의 효과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제Ⅴ장(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 투자)에서는 경기회복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전략기술·신산업에 대한 미시적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선별적 지원 등 미시적 대응을 요구하였고, 제Ⅵ장(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수출)에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추진과 해외 탈중국 움직임에 대응한 국내 유인책 마련을, 제Ⅶ장(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인구)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정책에 출산·육아 지원에 더해 혼인 요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제Ⅷ장(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기후·에너지 위기)에서는 국제 기후질서 대응을 위해서 경제전반의 저탄소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023 대한민국 경제



발 간 일 7. 20.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개요

대한민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2022년 실질GDP는 1960년에 비해 67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고환율과 함께 인구고령화 및 총인구의 감소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와 부문별 주요 경제 지표 및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안내서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주요 내용

「2023 대한민국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를 살펴보고, 부문별 경제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부문별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3부와 부록으로 구성되며, 제Ⅰ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제Ⅱ부에서는 경제지표를 생산·분배·지출·성장·금융통화로 구분하여 부문별 주요 경제지표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제Ⅲ부에서는 다양한 경제정책의 정책목표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에 새로 추가된 ‘부록: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서는 부문별 주요 경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파급경로를 분석하였다.

재정·경제 정보 제공

조사분석

업무소개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의정지원활동으로서 조사·분석 업무란,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회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¹⁸에 근거하여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회답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분석 업무는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실에서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NALS)으로 조사·분석을 요구하면, 조사분석시스템(RARIS)을 통해 접수한 뒤 담당 분석관을 지정하고, 회답서 작성 및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요구자에게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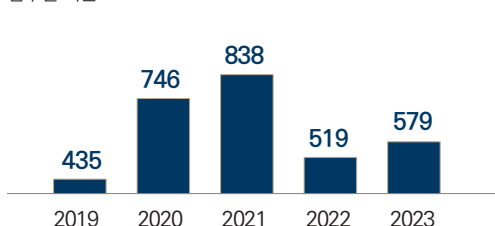
2023년 실적

2023년 한 해 동안 579건의 조사·분석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접수되어 회답이 송부되었으며, 조사·분석 회답이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RARIS 시스템 개선과 함께 업무개선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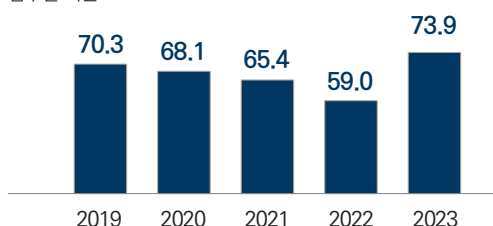
먼저 RARIS 개선과 관련하여 NALS와 RARIS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였고, 조사·분석 회답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분석 요구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회답 기한일을 변경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업무방식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분석 지정 단계에서 실·국 또는 과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부서장 간 회의를 거쳐 지정하고, 조사·분석 회답 단계에서는 주기적으로 회답 지연 여부를 점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회답 기간 준수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며, 우수 조사·분석 회답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방안(2023. 11. 23. 회보 공유)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59.0~70.3% 수준이었던 조사·분석 회답기한 준수율이 2023년도에는 73.9%로 향상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조사·분석 회답 현황 (단위: 건)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조사·분석 회답기한 준수율 (단위: %)
접수일 기준



¹⁸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5.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업무소개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www.nabostats.go.kr)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경제와 관련된 주요 통계 및 분석들을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이다. NABOSTATS는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재정·경제 지표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정리·재구성한 위원회별 통계,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한 예·결산 심사연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실적

2018년 515건으로 시작된 NABOSTATS는 제공하는 재정·경제 지표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여 2023년 528건의 통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의 신속한 최신화가 가능하도록 OPEN-API를 활용한 자동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99건이었던 연동 건수는 2023년 220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NABOSTATS는 통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시각화 방식과 분석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NABOSTATS가 제공하는 통계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 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를 제정함으로써 통계 담당 분석관을 지정하여 통계작성 및 오류검증을 수행하게 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정확도·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록을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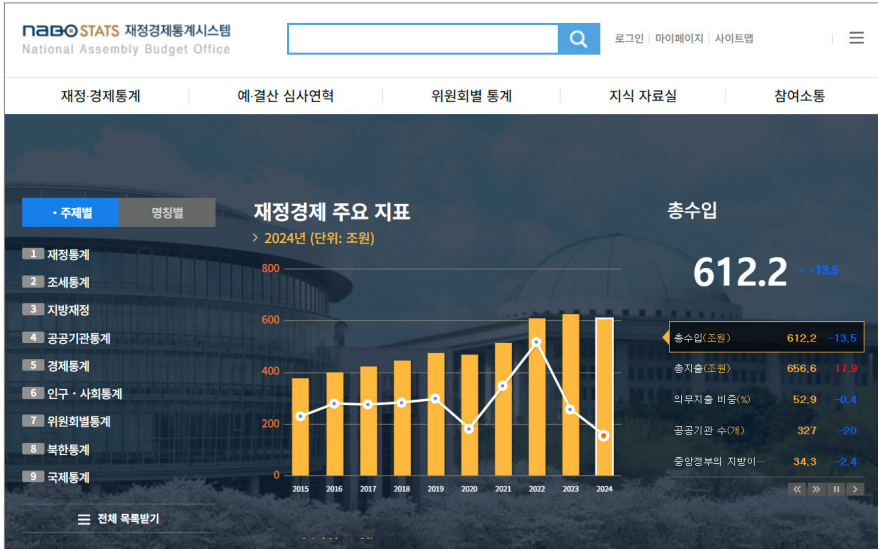
NABOSTATS 통계 유형 및 주요 내용

재정통계	세입세출통계, 분야별·유형별 예산, 예산과정	63
조세통계	국세, 지방세, 국제조세 및 조세특례	31
지방재정	지방재정 구조, 지역별 지방재정 여건	13
공공기관 통계	공공기관의 지정현황, 인력현황, 재무현황	14
경제통계	국민계정, 산업 및 고용, 대외경제, 물가·통화	39
인구·사회통계	인구 수 및 인구 추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	29
위원회별 통계	상임위별 재정현황, 주요 정책 통계	302
북한통계	남북한 경제협력·교류, 남북 비교, 북한 인구·경제 등	31
국제통계	OECD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등	47
예·결산 심사연혁	예산 수정내역, 예산부대의견,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등	5
합계		합계 528

* 국제통계 중복 제외

이용방법

·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www.nabostats.go.kr)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 우상단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바로가기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보고서 | 정기간행물 | 알림&소통 | 기관소개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새로운 발간물

구분	제목	발행일
[참고자료]	1. NABO Focus 제71호]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2024-05-14
[참고자료]	2. NABO 경제동향 (제42호)	2024-04-26
[참고자료]	3. NABO 재정동향&이슈 (2024년 Vol.1, 통권 제24호)	2024-04-26
[분석보고서]	4. 2024 경제전망	2024-03-29
[참고자료]	5.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 (2024년 Vol.1 제26호)	2024-03-29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2023 대한민국 재정 | 2023 대한민국 경제 | 2023 대한민국 조세 |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3 NABO 연차보고서

CHAPTER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주요 활동

NABO 설립 20주년 기념사업

토론회 및 설명회

대·내외협력

업무협약

NABO 설립 20주년 기념사업

설립 20주년 기념식

| 일자 | 10. 19. | 장소 |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격려사, 국회 예산정책처 의정 지원 서비스 활용 우수의원대상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원내대표·국제기구·유관기관 등의 기념 축하, 20주년 기념 미디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처장님과의 대화 및 국회예산정책처 5행시 등의 직원 참여 이벤트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내 전 직원이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나비 정원(의정관 3층 중앙홀과 도서관 사이 연결통로)에 히스토리 월을 조성하여 연대표와 함께 발간간행물, 사진, 영상자료 등을 전시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과정과 업무성적을 되새기고, 향후 목표와 비전을 대내외에 공유하였다.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정책현안 연속토론회-①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 일자 | 9. 7.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의 발제, 류덕현 중앙대 교수,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성명재 홍익대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을 통해 그간의 세수추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수오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정책현안 연속토론회-②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 일자 | 9. 21.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태형 KOTRA Invest KOREA 대표와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의 발제,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주세돈 포스코 기술연구원장, 김중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대표이사의 토론을 통해 글로벌 자본의 이동성이 심화된 국제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였다.



정책현안 연속토론회-③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 일자 | 9. 22.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와 최병권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이서영 솔터초등학교 교사, 임완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정겸 충남대학교 교수의 토론을 통해 창의성, 다양성, 융합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교육 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책현안 연속토론회-④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

| 일자 | 11. 1.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책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의 발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년」 발간

Ⅰ 일자 Ⅱ 2024. 2. 28. Ⅲ 발간부서 Ⅳ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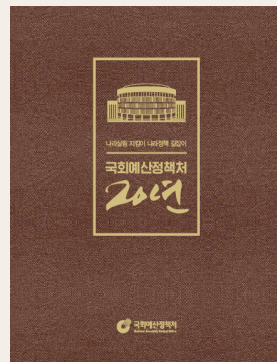
200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법」 시행으로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국회예산정책처 발전과 성과를 기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구성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기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20년」을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년」 제작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기관 전체의 역사를 서술한 통사 및 업무별 발전상을 담은 부문사와 함께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등을 담은 특집과 기타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통사는 서술 대상 기간인 20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및 기틀을 형성하는 과정을 서술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증가하는 국가재정 분석 수요에 대응하면서 최고의 재정정책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노력을 서술하였다.

업무별 부문사에서는 실·국별 업무의 주요한 변화와 성과를 다루었으며 해당 업무에 몸담았던 전·현직자의 회고를 담아 업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소감과 전망 등을 포함하였다. 끝부분에는 각 실·국별 부서장이 생각하는 업무발전방안으로 현재 국회예산정책처가 마주한 재정·정책 거건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였다.

특집 부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23년도에 추진한 각종 행사 소식을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 20주년 설립기념식, 제1회 아시아 의회 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신입직원 간담회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전 직원이 설립 20주년에 대한 감상을 수기로 작성한 전 직원 한마디를 수록하였다. 한편 부록은 국회예산정책처 20년 사진모음집, 주요 업무 실적 및 분석 보고서와 역대 처장 명단, 조직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 일자 | 10. 11. ~ 10. 13.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제2세미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11.(수) ~ 10.13.(금) 3일에 걸쳐 OECD와 공동으로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 의회예산기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신뢰성 높은 공공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와 공동으로 주도하여 설립한 기구이다.

10월 12일(목) 개최된 출범식에서 케빈 페이지(Kevin Page) 전(前) 캐나다 의회예산처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의회예산기구 도입 이후 공공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된 사례와 효과적인 의회예산기구 운영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예산기구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 책임성(Fiscal Responsibility)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의 운영 내실화 방안에 관하여 로물로 엠마누엘 미랄(Romulo Emmanuel Miral) 필리핀 하원 의회정책예산조사국장은 보고서 발간 시 요약본 제공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캐서린 힐(Katie Hill)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예산처 수석분석관은 분석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기관 홍보 동영상의 제작·게재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각각 제안하였다. 오후에 이어진 세 차례의 세션에서는 아시아 의회예산기구의 운영 현황과 의회예산기구 운영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13일(금)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재 워크숍 및 참가국 간 여덟 차례에 걸친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중장기 재정전망과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 등 주요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0일(수) 국회의정관에서에서 설립 20주년 기념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에세이 공모전은 공교육 개혁, 연금개혁, 청년창업 등 경제·재정 현안에 대한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교육 개혁방안,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응모하도록 하였다. 7월부터 약 3개월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응모작이 접수되었고,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통해 공모전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지황오(대상), 김두성(최우수상), 이지호(최우수상), 김은진(우수상), 신지윤(우수상), 정지윤(우수상), 황영석(우수상)등 7명이 수상하였다.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결과

상격	부문	이름(소속)	응모작
대상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지황오(건국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정책 제언 - 창업 생태계 구성방안을 중점으로
최우수상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김두성(인하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제언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교육 개혁방안	이지호(이화여대)	챗GPT를 활용한 국어 교육
우수상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정지윤(연세대 경제대학원)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전략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교육 개혁방안	황영석(한국기술교육대)	문제 해결 능력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초중등 공교육 혁신 학습 모델 개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신지윤(숙명여대)	세대 간 공존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교육 개혁방안	김은진(고려대)	GAI 교과서의 수준별 공교육 제공 방안

토론회 및 설명회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 일자 | 10. 31.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사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토론회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알뜰 재정, 살뜰 민생”으로 표현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민생·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임을 밝히며,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분야와 그에 따른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총량·총괄 분석과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재정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세출 구조조정 및 R&D 등으로의 재원 재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책임성·효과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시 정부 재정준칙안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준칙안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초과세수 발생 시에는 국가채무 상환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제고 및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표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 정의당 장혜영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심사 방향과 중점 심사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2024년 예산안 편성의 특징과 심사의 방향 그리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 등에 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일자 | 11. 9.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세법개정안 토론회」는 매년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토론회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상훈 기획재정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로 밝히면서, 영상콘텐츠 투자 촉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였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기존 조세정책 기조하에 경제 활성화 및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의 세제지원을 일부 포함한 소폭의 개정으로 평가하였다. 개선과제로는 세수 확충과 세입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조세정책의 경우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여 국회 심사를 거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병구 교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을 증세 기조로 전환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포용과 혁신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천오 교수는 최근 세수여건을 고려할 때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타당하나,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토론자인 강준현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이 효과가 없는 이념 감세에 불과하며 세법개정안에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고민이 부채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재정건전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임시 소비세액공제 도입,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류성걸 기획재정부위원회 간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당면한 경제 및 재정위기 대응과 출산·양육 및 지역균형발전 등 미래지향적 개선과제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

| 일자 | 9. 14.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설명회는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최병권 예산분석실장은 공공기관 지정 변경과 관련해 지정 기준의 타당성 및 종합적 고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는 자산효율화금액이 과다계상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공공요금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에 해외지분투자금액이 포함되는 문제와 미수금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문제,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 지급 비용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지급 비용이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발전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마련 필요성,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 등의 출자사업 손실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리츠의 초과수익 공유조건 미설정으로 인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수입이 축소되고 민간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에서는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제도 운영 문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문제, 차등화되지 않은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제에 이어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차이점,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간 계약의 중요성, 캐나다 하베스트사에 대한 손실이 한국석유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대·내외협력



2023년도 국회의장 업무보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2일(목) 15시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조의섭 처장은 설립 20주년을 맞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재정·정책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목표로 '변화를 주도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원

년'을 설정하고, 그 추진과제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아젠다 선도',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재정통제권 강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 민생경제위기 등 주요 현안 분석, 재정총량 분석 강화, 조기 결산 지원 및 경제·세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과 직제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당부하면서,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과 입법과정에서 비용추계의 활용도 제고도 요구하였다.



OECD 경제국 화상회의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3일(금) OECD 경제국(Economics Department)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설립 방안에 대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알베르토 곤잘레스 판디엘라(Alberto Gonzalez Pandiella) 임시 과장과 폴라 가르다(Paula Garda) 수석 경제학자를 포함하여 5명의 OECD 팀이 참석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김윤성 예

산분석관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례를 라틴아메리카 지역 독립재정기구 설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배경, 발전 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판디엘라 OECD 경제국 임시 과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례가 향후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재정기구 설립에 있어 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연례협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과 4월 20일(목)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부터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면담은 4번째로 진행된 면담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과 무디스 아누슈카 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Ms. Anushka Shah, VP/Senior Analyst) 등이 참여하였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인구 구조 및 고령화 이슈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경제전망, 고령화가 공공지출 및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캄보디아 정부 방문단 면담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25일(화) 캄보디아 정부 방문단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과정과 운영 체계,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거버넌스 개혁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이고 개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의 모범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방문단은 헬 참로운(HEL Chamroeun)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차관, 휴오투 시니드(HUOT Synead) 인사부 차관, 칸 바낙(KHAN Vanak) 법무부 차관, 찬 소티아(CHAN Sothea) 내무부 부차관 등 2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조익섭 처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등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캄보디아 방문단은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의 효과와 20년간의 발전 양상,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국회의 조치, 예산 활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의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협의단 방문 및 면담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 15일(목)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협의단과 한국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방지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싱가포르 소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AMRO의 요청에 의하여 2017년부터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케빈 쉑(Kevin C. Cheng) 단장을 포함한 5명의 협의단이 참석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등이 참여하여 2023년 예산 운영, 재정준칙, 연금 개혁, 장기재정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케빈 쉑 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를 다시 방문하여 추가적인 면담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몽골 재무부 방문단 면담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 26일(월) 몽골 재무부 방문단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설립 과정과 운영 체계, 재정여건과 재정건전성 등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KDI에서 추진하는 “몽골 재무부 재정관리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예산 심의 과정 등에 관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방문단은 오토곤바야르 간바라트(Otgonbayar Ganbaatar) 단장을 비롯하여 1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정원철 경제분석관 등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제9기 제4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11일(화) 제9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하연섭 위원장 등 12인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와 재정·경제 정책의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의 재정여건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한국경제의 신성장전략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세제 개편 방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 부담 완화를 위한 퇴직연금 내실화 방안, 인플레이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재정정책의 포워드 가이드선스(forward guidance) 활용 등 다양한 재정·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중립적인 견지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아주기를 당부하였다.



2023년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 8월 25일(금) 면담을 실시했다. IMF는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IV)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사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과 헤럴드 핑거 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

(Mr. Harald Finger,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IMF 연례협의단은 금년 한국의 재정전망,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마련 방안,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등 단기재정 문제와 함께, 정부의 재정준칙안 및 연금개혁안, 보건 및 연금재정 전망 등 장기재정 문제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IMF 연례협의단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하방 흐름이 크지 않고,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교역상대국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와 IMF 연례협의단은 금년 세입결손과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최대한 축소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방글라데시 대표단과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현안 논의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6일(금) 방글라데시 의회의 환경 및 기후변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 및 세계은행 관계자들과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현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이버 초우드후리(Saber H. CHOWDHURY) 단장을 포함한 8명의 방글라데시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이은주 선임환경정책관을 포함한 세계은행 관계자 3인과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진익 경제분석국장, 예승우 경제분석총괄과장, 김윤희 경제분석관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현안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이버 초우드후리 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기후변화 환경 제도와 예산 현황을 듣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국제감축으로 37.5백만톤을 감축해야 하고 방글라데시도 61.9백만톤을 국제협력으로 감축해야 하는 만큼 향후 두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글라데시 대표단은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지식교류(Knowledge Exchange)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환경부 및 산하 기관, 국회를 방문하여 녹색 ODA 사업,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현안과 예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방글라데시 대표단은 방글라데시 의회 환경 및 기후변화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후변화 대사, 기획부 차관, 재경부 차관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10기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20일(금) 제10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0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재정, 조세,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행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회의에 참석한 13인의 자문위원으로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2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였다. 자문위원들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20년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예

산분석과 비용추계 등을 통해 위상을 높여왔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는 고유의 분석모형 구축,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연구 체계의 개발, 우수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다.



2023년도 학술지 편집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13일(수) 2023년도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하연섭 위원장 등 제6기 학술지 편집위원 10인이 참석하였으며, 2022~2023년 「예산정책연구」의 활동 보고와 향후 학술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하연섭 위원장은 “「예산정책연구」가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투고자 저변을 넓혀가며 한국을 대표하는 재정전문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정책연구」가 보다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학계 및 유관기관과의 장기적인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약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14일(목)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연례협의단과 한국 재정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케빈 쉑(Kevin C. Cheng) 단장을 포함한 9명의 협의단이 참석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등이 참여하여 2023년도 예산 운영과 2024년도 예산안, 세수오차의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연금개혁,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케빈 쉑 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1. 26. 한국행정학회와 업무협약



4. 28. 한국재정학회와 업무협약



5. 2. 한국세무학회와 업무협약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예산, 기금 및 재정운용 정책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주요 학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각 학회들과 전문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정책 분야 평가 등 협력 지원, 전문분야별 인력 교류와 학술대회·토론회 공동개최 등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10. 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 13. 몽골 국회사무처



11. 9. 인도네시아 하원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도네시아 하원사무처, 몽골 국회사무처 등 해외 주요 국제기구 및 의회예산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각 기관들과 지식 및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2. 7. 대한민국시도의회의운영위원장협의회



2. 2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국회예산정책처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예산자료분석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 NABO 연차보고서

CHAPTER

IV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부록

2023년 보고서 발간 목록

2024년 보고서 발간 계획

2023년 보고서 발간 목록

연번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예산안분석			
1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예산분석총괄과	01. 17
2	2023 대한민국 재정	예산분석총괄과	03. 13
3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행정예산분석과	09. 20
4	[예산안 분석시리즈 I]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예산분석총괄과	10. 31
5	[예산안 분석시리즈 I]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예산분석총괄과	10. 31
6	[예산안 분석시리즈 II] 2024년도 재정총량 분석 I	예산분석총괄과	10. 31
7	[예산안 분석시리즈 II] 2024년도 재정총량 분석 II	예산분석총괄과	10. 31
8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예산분석과	10. 31
9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산업예산분석과	10. 31
10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예산분석총괄과	10. 31
11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회예산분석과	10. 31
12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예산분석과	10. 31
13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행정예산분석과	10. 31
14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예산분석과	10. 31
15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예산분석과	10. 31
16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예산분석과	10. 31
17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사회예산분석과	10. 31
18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예산분석과	10. 31
19	[예산안 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예산분석총괄과	10. 31
20	[예산안 분석시리즈 IV]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사회예산분석과	10. 31
21	[예산안 분석시리즈 V]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사회예산분석과	10. 31
결산분석			
22	[결산 분석시리즈 I]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예산분석총괄과	07. 27
23	[결산 분석시리즈 I]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	예산분석총괄과	07. 27
24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예산분석과	07. 27
25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산업예산분석과	07. 27
26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예산분석총괄과	07. 27
27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회예산분석과	07. 27
28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예산분석과	07. 27
29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행정예산분석과	07. 27
30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예산분석과	07. 27
31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예산분석과	07. 27
32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예산분석과	07. 27
33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사회예산분석과	07. 27
34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예산분석과	07. 27
35	[결산 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예산분석총괄과	07. 27

연번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36	[결산 분석시리즈Ⅲ]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공공기관평가과	07. 27
37	[결산 분석시리즈Ⅲ]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Ⅰ	공공기관평가과	07. 27
38	[결산 분석시리즈Ⅲ]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위원회별 분석Ⅱ	공공기관평가과	07. 27
39	[결산 분석시리즈Ⅳ]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산업예산분석과	07. 27
40	[결산 분석시리즈Ⅴ]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사회예산분석과	07. 27
사업평가			
41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공공기관평가과	04. 12
42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	경제산업사업평가과	04. 27
43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	경제산업사업평가과	06. 16
44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사회행정사업평가과	06. 16
45	[결산 분석시리즈Ⅵ]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1.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사회행정사업평가과	07. 27
46	[결산 분석시리즈Ⅵ]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2.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사회행정사업평가과	07. 27
47	[결산 분석시리즈Ⅵ]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3.디지털 전환 정책 및 주요 사업 분석	경제산업사업평가과	07. 27
48	[결산 분석시리즈Ⅵ]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4.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사회행정사업평가과	07. 27
49	[예산안 분석시리즈Ⅶ]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1)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경제산업사업평가과	10. 31
50	[예산안 분석시리즈Ⅶ]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2) 국고보조사업 분석	사회행정사업평가과	10. 31
51	[예산안 분석시리즈Ⅶ]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3) 재난정책보험 사업 분석	사회행정사업평가과	10. 31
52	[예산안 분석시리즈Ⅶ]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1. 요약	경제산업사업평가과	11. 07
53	[예산안 분석시리즈Ⅶ]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2.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산업사업평가과	11. 07
54	[예산안 분석시리즈Ⅶ]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사회행정사업평가과	11. 07
55	[예산안 분석시리즈Ⅶ]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4.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경제산업사업평가과	11. 07
56	[예산안 분석시리즈Ⅶ]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5. 첨단기술 육성 전략	경제산업사업평가과	11. 07
57	[예산안 분석시리즈Ⅶ]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6. 인재양성 전략	경제산업사업평가과	11. 07
58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사회행정사업평가과	11. 17
공공기관 평가			
59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공공기관평가과	04. 05
60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Ⅰ	공공기관평가과	09. 14
61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Ⅱ	공공기관평가과	09. 14
62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Ⅲ	공공기관평가과	09. 14
63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Ⅳ	공공기관평가과	09. 14
재정전망			
64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Ⅰ	사회비용추계과	03. 31
65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Ⅱ	사회비용추계과	03. 31
66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Ⅲ	사회비용추계과	03. 31
67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Ⅳ	사회비용추계과	03. 31
68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 연구	추계세제총괄과	09. 21
69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사회비용추계과	10. 10
70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비용추계과	10. 10
71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추계세제총괄과	10. 31

연번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비용추계			
72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추계세제총괄과	05. 26
세제분석			
73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1. 09
74	2023 대한민국 조세	세제분석1과	04. 21
75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세제분석2과	04. 24
76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세제분석2과	08. 16
77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세제분석1과	10. 31
78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세제분석2과	10. 31
79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세제분석2과	10. 31
80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세제분석1과	12. 27
경제전망			
81	2023 경제전망 I [지출 부문]	거시경제분석과	03. 31
82	2023 경제전망 II [생산 부문]	거시경제분석과	03. 31
83	2023 경제전망 III [소득 부문]	거시경제분석과	03. 31
84	2023 경제전망 IV [성장 부문]	거시경제분석과	03. 31
85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지출부문)	인구전략분석과	10. 05
86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 (생산부문)	인구전략분석과	10. 05
87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I (소득부문)	인구전략분석과	10. 05
88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성장부문)	인구전략분석과	10. 05
경제분석			
89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산업자원분석과	01. 31
90	2023 대한민국 경제	경제분석총괄과	07. 20
정기간행물			
91	NABO 재정동향&이슈 2023년 Vol.1 (제22호)	사회예산분석과	04. 21
92	NABO 재정동향&이슈 2023년 Vol.2 (제23호)	사회예산분석과	12. 26
93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1 (제22호)	추계세제총괄과	03. 14
94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2 (제23호)	추계세제총괄과	06. 23
95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3 (제24호)	추계세제총괄과	08. 31
96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4 (제25호)	추계세제총괄과	12. 21
97	NABO 경제 동향(제35호)	인구전략분석과	02. 20
98	NABO 경제 동향(제36호)	인구전략분석과	04. 20
99	NABO 경제 동향(제37호)	산업자원분석과	06. 23
100	NABO 경제 동향(제38호)	경제분석총괄과	08. 23
101	NABO 경제 동향(제39호)	경제분석총괄과	10. 23
102	NABO 경제 동향(제40호)	경제분석총괄과	12. 22
103	[NABO Focus 제56호]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1. 06
104	[NABO Focus 제57호]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3. 06
105	[NABO Focus 제58호]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재정전망	사회비용추계과	04. 07
106	[NABO Focus 제59호] EU와 미국의 '탄소무역장벽' 주요 내용과 영향	산업자원분석과	05. 24

연번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107	[NABO Focus 제60호]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 - 소득 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한 기초연금 지급의 소비증가 효과 추정	인구전략분석과	07. 07
108	[NABO Focus 제61호]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사회비용추계과	09. 06
109	[NABO Focus 제62호]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행정예산분석과	09. 26
110	[NABO Focus 제63호]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산업예산분석과	10. 16
111	[NABO Focus 제64호]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산업자원분석과	10. 23
112	[NABO Focus 제65호]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거시경제분석과	11. 17
113	[NABO Focus 제66호]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사회예산분석과	11. 20
114	[NABO Focus 제67호]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세제분석2과	11. 21
115	[NABO Focus 제68호]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내용	예산분석총괄과	12. 26
116	[NABO Focus 제69호]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주요내용	예산분석총괄과	12. 27
117	예산추추 2023년 첫 번째 (통권 제69호)	기획예산담당관실	02. 23
118	예산추추 2023년 두 번째 (통권 제70호)	기획예산담당관실	05. 22
119	예산추추 2023년 세 번째 (통권 제71호)	기획예산담당관실	08. 21
120	예산추추 2023년 네 번째 (통권 제72호)	기획예산담당관실	11. 22
121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기획예산담당관실	03. 20
122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기획예산담당관실	06. 20
123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기획예산담당관실	09. 20
124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기획예산담당관실	12. 20
125	2022 NABO 연차보고서	기획예산담당관실	05. 30
기타			
126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정책총괄담당관실	09. 18

2024년 보고서 발간 계획

보고서명		발간예정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	정책자료집 I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조세
		대한민국 공공기관
		대한민국 경제
	정책자료집 II	대한민국 지방재정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예·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해외인력 유치 정책·사업 평가	
	TIPS(민간투자주도형) 사업 평가	
	공익기능직불제 사업 평가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2025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요점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소득세 장기전망 모형 연구	
	대한민국 사회보험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규모 비교·분석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법인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2074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5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4년 경제전망	
정기 및 수시간행물	2025년 및 중기 경제전망	
	NABO 재정동향&이슈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NABO 경제 동향	
	NABO Focus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2023 NABO 연차보고서

발간일	2024년 5월
발행인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인 쇄	(주)명문기획(TEL 02-2079-9200~2)

ISSN 2982-9208

© 국회예산정책처, 2024



국회에산정책처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5-001582-10

ISSN 2982-9208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